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2011년 2월 21일

정한울_EAI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정원철_EAI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취임3주년 총평】 잘했다 44.7% vs. 잘못했다 53.6%

- (1) 잘한 분야 외교 23.9% > 경제 18.2% > 남북관계 8.6% > 복지 8.3% > 정치 3.3% 순
- (2) 못한 분야 남북관계 23.5% > 경제 19.5% > 복지 14.7% > 정치 10.9% > 교육 7.4 순
- (3)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전망 : 상승할 것 20.7%, 현상유지 42.3%, 떨어질 것 34.4%

【4년차 국정방향】 문제는 경제다! 체감경제 이상징후 뚜렷

- (1) 국정우선순위 : 경제양극화 20.7% > 성장 19.0% > 삶의 질 15.9% > 안보 10.0%
- (2) 체감경제 악화: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급감.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 (3) 구제역/전세대란/물가대란 - “당분간 해결 어렵다” 비관 높아
- (4) 민생현안 비관 클수록 정부정책(개헌/FTA) 반대로 이어져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 (1) 한미FTA 비준 찬성 65.8%, 한EU FTA 비준찬성 71.8%, 선별급식 55.2%
- (2) “조만간 경제위기를 탈출 할 것” 58.1%
- (3) “한국사회 법 대로 살면 손해” 67.8%
- (4) 5년 단임 대통령제 바뀌야 한다” 찬성 38.3%, 현재 제도 유지 57.2%
- (5) 안보 불안 68.2%, 남북정상회담 찬성 65.7%, 대북지원 확대/유지 해야 ↑ 50.3%

【정기지표】

-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5.0%, 전월 대비 4.9%포인트 하락
- (2)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전월대비 4.1%포인트 상승, 유시민 7.2% > 오세훈 5.7%
- (3) 한나라당지지 40.8%, 민주 20.4%- 민주당 좌향좌로 중도층지지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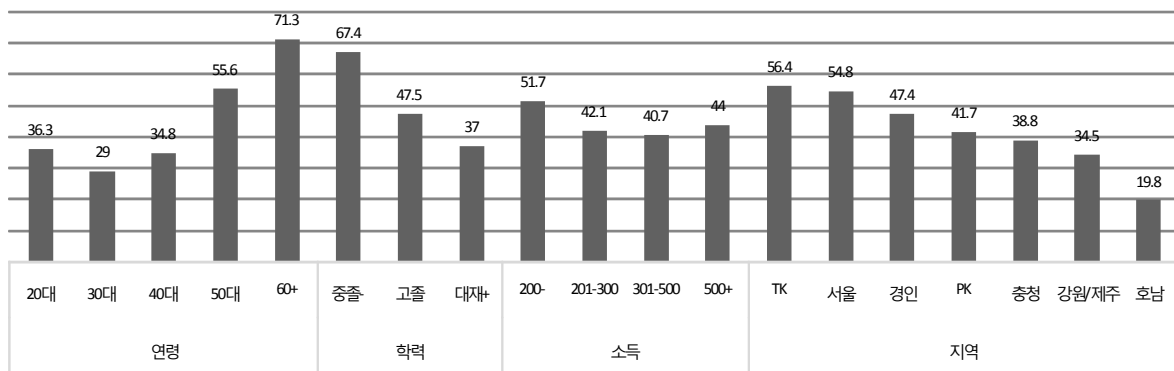
[보도 자료용 보고서 초안임]



【이명박 대통령 3년 총평】 잘했다 44.7% vs. 잘못했다 53.6%

- 오는 2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을 앞선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53.6%(별로 못했다 37.8%, 전혀 못했다 15.8%)였지만 잘했다는 응답은 44.7%(매우 잘함 8.1%, 대체로 잘함 36.6%)이다. 2월 국정지지도 45.0%였다.
- 세대별로는 50-60대 이상,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소득별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지역과 서울에서 5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국정지지율이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50%대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1] 계층별 이명박 대통령 취임3년 국정운영 평가(%)



PK/강원 민심의 향방은?

- 특징적인 것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의 온도 차이이다. 대구경북에서 56.4%가 지지를 밝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41.7%로 세종시 문제로 비판 여론이 높은 충청권(38.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산경남과 함께 강원/제주에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3년 평가가 인색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부산경남 및 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는 강한 야성향의 표심을 보여주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돌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김두관 경남지사를 배출시켰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선전을 한 바 있다. 강원도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전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민주당과 야당이 선전하고 있다.
-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현 정부 들어와 지역적 소외감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소외감이 대통령 3년 평가에 인색해지고, 각종 선거에서 야성향의 표심이 강화된 주된 요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잘한 분야 : 외교23.9%>경제18.2%>남북8.6%>복지8.3%>정치3.3%>사회3.2%>교육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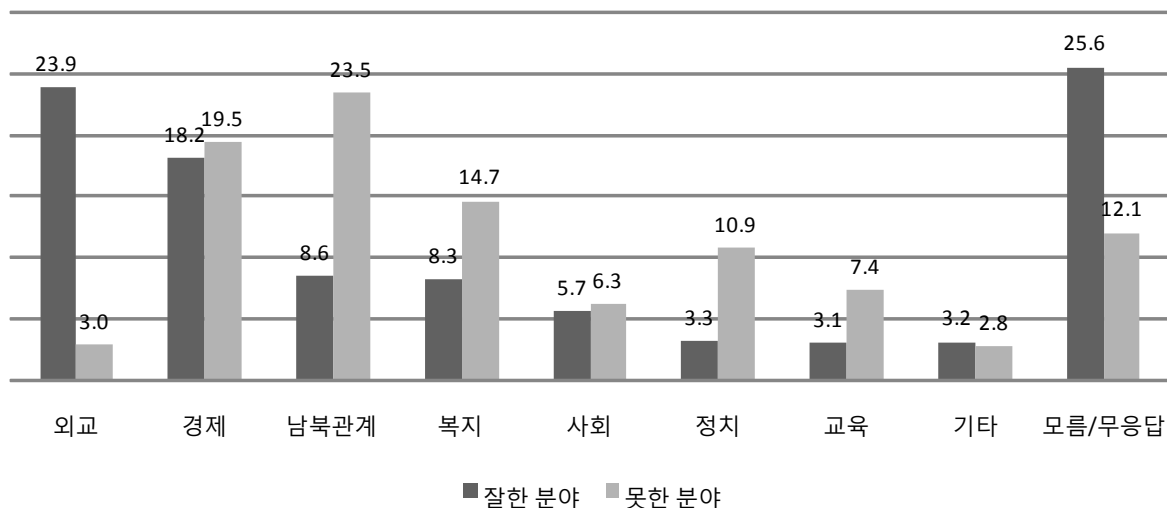
못한 분야 : 남북23.5%>경제19.5%>복지14.7%>정치10.9%>교육7.4%>사회6.3%>외교3.0%

- 지난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외교와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남북관계와 경제분야, 복지분야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잘한 분야를 보면 외교 23.9%, 경제 18.2%, 남북관계 8.6%, 복지 8.3%, 사회 5.7%, 정치 3.3%, 기타 3.2%, 교육 3.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이 25.6%나 되었다. 반면 못했다고 보는 분야로는 남북관계가 23.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경제 19.5%, 복지 14.7%, 정치 10.9%, 교육 7.4%, 사회 6.3% 순이었다. 외교 분야는 못했다는 응답도 가장 낮아 3.0%에 그쳤다. 기타 2.8%, 모름/무응답 12.1%로 나타났다. 경제와 복지 분야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중첩되고 있다.
-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해외원전 수주 지휘 및 최근 에텐만호 구출작전 등 대외 관계에서 대통령이 주도한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여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잘한 분야로 경제를 꼽은 응답도 두 번째로 많았지만 못한 분야로도 경제를 꼽은 응답이 19.5%였다. 이후 자세히 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인식에서 적지 않은 이상(異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전망 : 상승할 것 20.7%, 현상유지 42.3%, 떨어질 것 34.4%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앞으로 국정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한 반면,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34.4%였다.

[그림2] 이명박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



[4년차 국정방향] 문제는 경제다 - 체감경제 이상(異常) 징후 뚜렷

민생현안 못 풀면 핵심국정과제(개헌/FTA) 추진 어려워

[이상 징후1]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국정우선순위 “문제는 경제다”

국정우선순위 -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안보 10.0%순

- 경제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강하다.
- 우선,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결과를 보자. 빈부격차 및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경제문제 및 개인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순이었고, 안보강화 10.0%, 국민통합 8.3%, 남북관계 개선 8.0%, 교육개혁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표1] 최우선 국정 아젠다 변화: 2010년 1월-12월 조사결과 비교 (%)

순위	최우선 아젠다	2010년 12월	변동	순위	최우선 아젠다	2011년 2월
1	경제양극화 완화	23.2		1	경제양극화	20.7
2	남북관계 개선	14.8		2	경제성장	19.0
3	경제성장	12.0		3	삶의 질 개선	15.9
4	국민통합	11.7		4	국가안보 강화	10.0
5	국가안보 강화	11.1		5	국민통합	8.3
6	삶의 질 개선	8.9		6	남북관계 개선	8.0
7	정치개혁	7.4		7	교육개혁	6.3
8	교육개혁	5.3		8	정치개혁	5.1
9	국제경제력 강화	3.8		9	국가경쟁력 강화	3.8
10	기타/모름/무응답	2.9		10	기타/모름/무응답	2.8

자료: EAI · 한국리서치 2010년 12월,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2011년 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작년 12월 대비,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중시 여론 급증, 2011년 국정의 중심 경제에 뒤야 “안보/남북” 이슈 감소했지만, 북한에 의한 돌발변수에 만반의 대비 갖춰야

- 지난 해 12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평도 피격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2월 조사에서는 여전히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20.7%로 1순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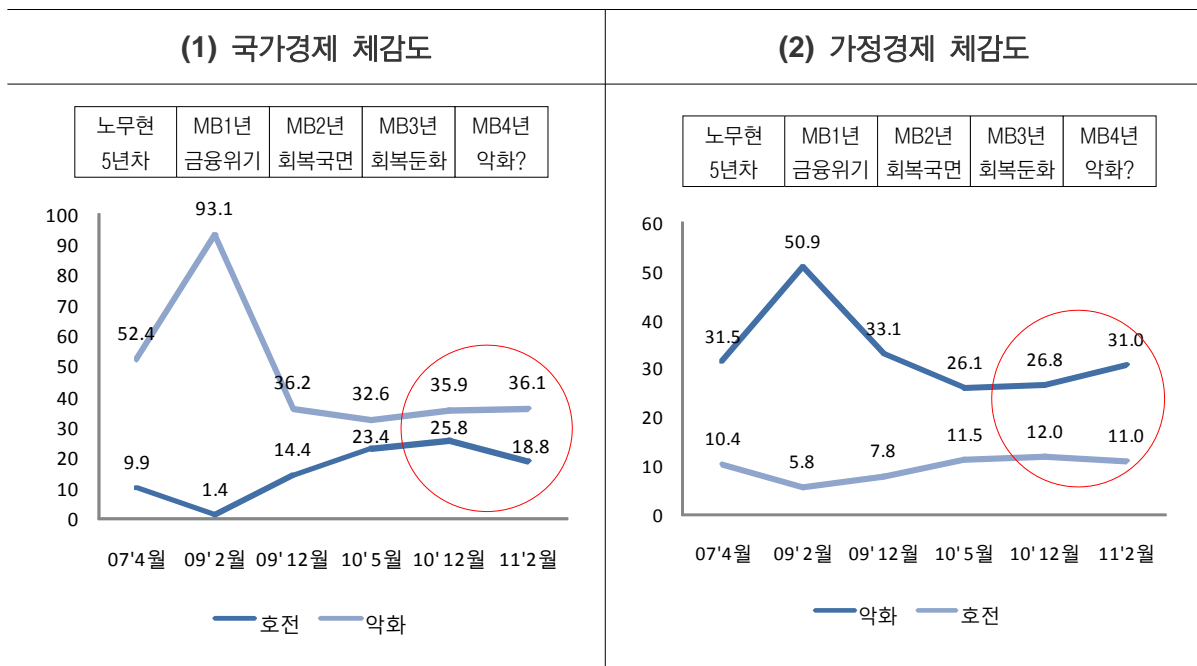


유지했다. 경제성장 아젠다는 지난달 3위(12.0%)에서 이번 달에는 7.0%포인트나 상승하여 2위로 올라섰고, 지난 조사 6순위였던 삶의 질 아젠다(8.9%)가 이번달에 6.0%포인트 상승하여 3위로 떠올랐다. 반면 지난 12월 조사에서 14.8%로 2순위로 꼽힌 남북관계가 이번조사에서 8.0%로 6순위로 밀렸고, 지난 조사 7위였던 정치개혁 아젠다(7.4%) 역시 한 계단 떨어진 8위(5.1%)에 머물렀다.

- 따라서 현재 경제양극화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들어와 경제성장 아젠다와 삶의 질 아젠다를 꼽은 응답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아젠다를 국정 최우선 과제를 꼽은 응답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와 개인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징후2] 체감경제 악화: 경제위기로 시달린 노무현 정부 5년차와 비슷한 수준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급감.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그림3]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체감인식 변화: 2007년 4월~2011년 2월 (%)



주: [그림3]은 EAI와 한국리서치가 국가경제상태와 개인경제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전, 현상유지, 악화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중 호전되었다는 응답과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 우선, 국가경제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 들어와 악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로] :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국가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9.9%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52.4%로 다섯배 이상 많았다. 대선정국에서 집권 후반기 내내 노무현 정부가 경제위기론으로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취임1주년 즈음인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직후였던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1.4%로까지 추락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무려 93.1%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비관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그러나 집권 2년차 후반인 12월 조사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여론이 14.4%,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로 그 격차를 크게 줄여 노무현 정부시기 보다는 체감경제가 나은 상태였다. 이러한 국가경제인식의 개선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했다(EAI <여론브리핑 제93호>¹⁾).
 -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그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호전 되었다는 비율은 23.4%, 12월 조사에서 25.8%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32.6%에서 35.9%로 비슷하게 상승했다. 회복세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이번에 조사한 2011년 2월 조사결과를 보면 회복세의 둔화국면을 넘어 악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8.8%로 7.0%포인트 줄고,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6.1%로 완만하지만 높아지는 추세다.
- 가정경제 체감도 인식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패턴이 보인다.
 -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론] : 가정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10.4%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2.54%로 세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체감도가 실제 가정경제 체감도보다 냉담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세계금융위기가 가정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5.8%로 반토막 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50.9%나 되었다.

1) EAI 여론브리핑 93호(정한울 · 정원철 2010. 12), EAI 여론브리핑 68호(정한울 · 정원철 2009.12)를 참조할 것.
 제93호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1116000000&code=kor_report&idx=9709&page=1
 제68호 http://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1116000000&code=kor_report&idx=8968&pag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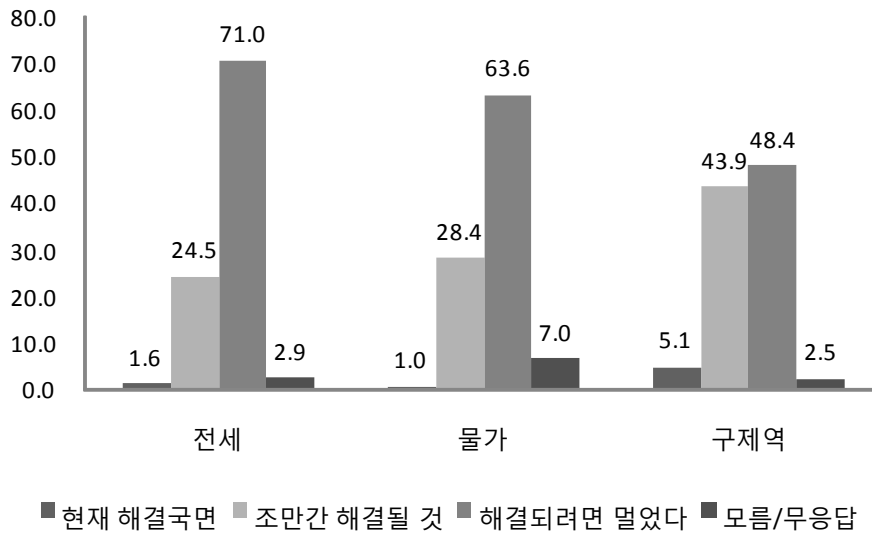


-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 되었다는 여론이 7.8%로 완만히 상승했고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33.1%로 줄어들었다.
-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가정경제인식에서도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된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나아졌다는 비율은 11.5%, 12월 조사에서 12.0%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26.1%에서 26.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2011년 4년차를 앞둔 2월 조사에선 가정경제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1.0%로 정체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1.0%로 다시 30% 대에 진입하여 노무현 정부 5년차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 체감경제인식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각종 선거에서 지지후보 결정에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체감경제가 회복세에서 악화추세로 돌아설 경우 대통령 국정평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경우 집권 3년차까지 대통령 지지율을 꾸준히 상승시켜온 이명박 정부지만 집권4년차의 국정지지율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징후3] 3대 민생현안 “당분간 해결 어렵다” 비관 높아 → 개헌 반대/FTA 반대로 이어져
구제역 문제 48.4%, 전세대란 문제 63.6%, 물가 문제 71.0%가 비관적 전망**

- 현재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제역 확산 문제, 물가문제,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비관적 인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세공급의 부족과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 문제의 경우 “현재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 는 응답이 1.6%,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곧 해결될 것” 으로 본 응답 DRU시 24.5%에 불과했다.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 는 비관적 전망이 무려 71.0%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이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물가난으로 표현되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해결되고 있다고 본 응답은 1.0%, 곧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28.4%,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답변이 63.6%로 전세문제에 대한 응답과 비슷했다.
- 구제역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세난이나 물가난에 비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5.1%,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43.9%,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그림4] 3대 민생현안 각각에 대한 해결전망 (%)



[정책적 함의]

민생문제(전세/물가/구제역)/경제위기 극복 전망 비관 ↑, 정부 정책(개헌/FTA 등) 반대여론 ↑
전세/물가대란 하에서 개헌 추진할 경우 역풍 가능성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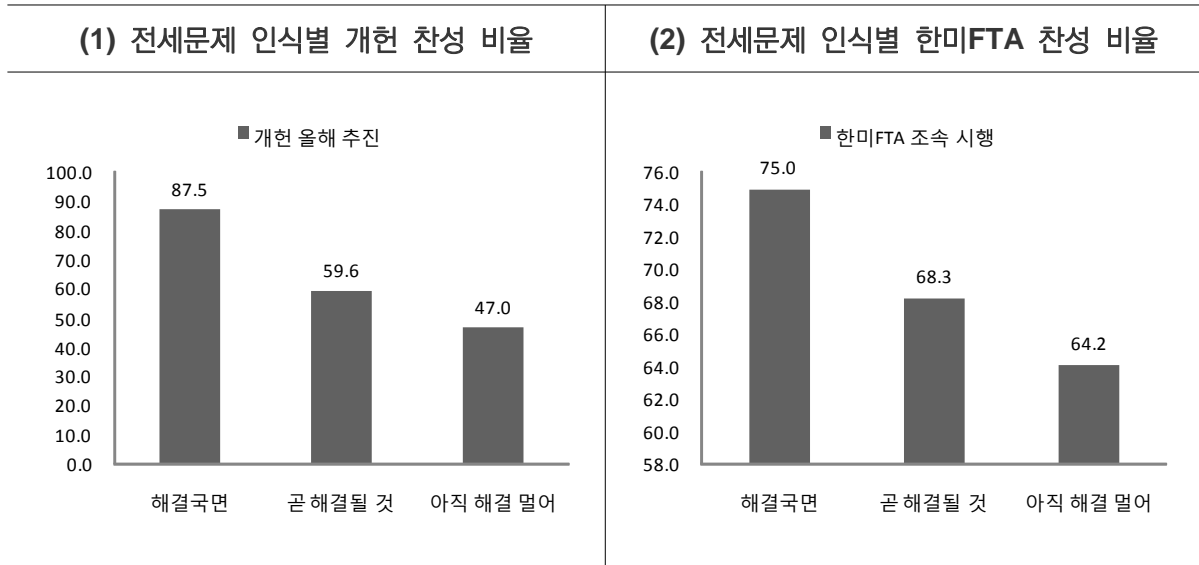
-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매우 심각할 경우 정부의 핵심 국정 아젠다를 추진에 큰 난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전세, 물가 문제처럼 민생현안이자 국민들이 해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이슈의 경우 이들 이슈의 해결이 어렵다고 볼수록 개헌이나 한미FTA 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 즉 민생문제와 같은 생활 이슈에 대한 해결이 안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핵심 아젠다의 추진 동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없이 정부의 우선순위대로 밀고 나갈 경우 적지 않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문제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전세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국면에 있다’ 고 보는 응답층에선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는 정부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87.5%로 매우 높다. 현재 ‘해결은 안 되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 으로 보는 응답층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59.6%로 조금 낮아진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 고 보는 비관층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는 47.0%만이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

- 한미FTA에 대해서도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층에서는 75.0%가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답했다. 반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층에서는 68.3%,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64.2%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즉 전세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반대여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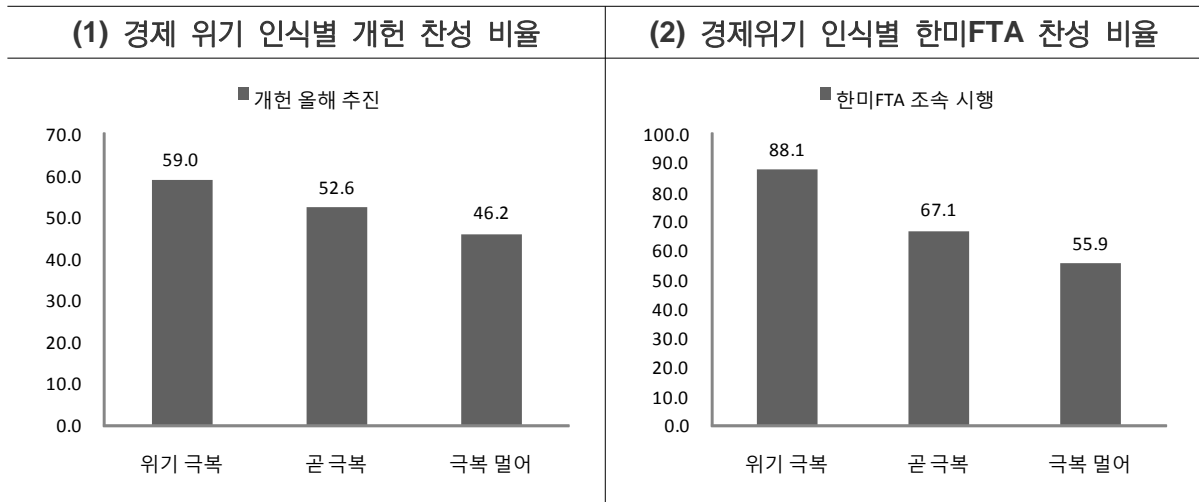
[그림5] 전세문제 전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경제위기 극복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개개의 민생 현안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제위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도 개헌, 한미FTA 등 정부 핵심국책과제에 대한 찬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부 안에 대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59.0%, 곧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 층에서 52.6%, 아직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46.2%만 개헌론의 올해 내 추진에 찬성을 했다.
-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낙관적인 층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시행에 88.1%가 찬성을, 곧 극복될 것이라는 층에서 67.1%가 찬성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층에서는 55.9%로 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 이 역시 정부가 개헌이나 한미FTA처럼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이념적 이슈를 추진해나가는 데 현재의 민생 현안이나 경제상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체감하기에 전세, 물가, 구제역 등 각종 민생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고, 경제위기 극복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나 FTA 이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6] 경제위기 인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1. 경제

경제, 사회현안에 있어서는 친정부 성향의 여론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FTA 국회비준 및 무상급식 대상 선정 문제 등에서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모든 학생 대상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기대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대상으로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별 급식 개념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서는 경제위기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1년 후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의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FTA】 한미FTA 비준 찬성 65.8%, 한EU FTA 비준찬성 71.8%

-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65.8% vs. 반대 27.3%, 모름/무응답 6.3%
-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71.8% vs. 반대 21.3%, 모름/무응답 6.8%
 - 조사결과 현재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한-EU FTA의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 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65.8%, 반대가 27.3%였고, 한-EU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71.8%, 반대 21.3%에 그쳤다.
 - 대통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찬성여론이 87.4%, 84.5%로 FTA의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반면 대통령 국정 비판층에서는 찬성여론이 59.6%, 민주당 지지층에서 62.2%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야성향의 응답층에서도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무상급식】 보편 급식 34.2% < 선별급식 55.2%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어 본 결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편적 급식론의 입장이 34.3%, “소득을 구분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는 선별 급식론의 입장이 55.2%,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입장도 9.7%였다. 모름/무응답이 0.7%였다.
- 이는 정치적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려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편적 급식론을 주장한 응답이 50.4%였고 선별급식론을 지지한 응답이 40.8%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보편적 급식론 지지가 17.6%, 선별적 급식론이 68.3%,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안의 서명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도 보편적 급식론은 27.1%, 선별적 급식론 지지가 58.9%, 무상급식 중단론이 13.5% 였다. 현재 추세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 발의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기대] “조만간 경제위기를 탈출 할 것” 58.1%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의 경우 현상유지 전망, 2009년 12월 조사와 차이 없어

- 현재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2011년 경제상황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는 응답은 10.4%만이 답해 아직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은 적지만, “아직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곧 극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58.1%로 가장 많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직 멀었다” 는 의견은 29.8%로 나타나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 1년 후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는 현실적 평가가 가장 많았지만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 전망 보다는 많았다. 다만 2009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크게 국가경제건 가정경제건 실제로 경제상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 국가경제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9.7%,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5.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1.5%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1년 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은 40.5%,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1%,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2.0%로 나타나 크게 개선된 점을 찾기 힘들다.
 - 가정 경제의 1년 후 전망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1.9%,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0%,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7.3%,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5.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4.6%로 이 역시 이번 조사 결과와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 정치/사회 신뢰 및 공정성

- 이명박 정부는 취임 1년차 촛불시위로 적잖은 정치적 흥역을 겪은 이래 매해 굵직한 대국민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인 40%~50% 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을 지나면서 촛불시위 때 10%대까지 내려 앉았던 지지율을 2009년 중도실용노선을 내놓으면서 다시 30%대로 끌어 올렸고, 2010년에는 다시 공정사회론과 친서



민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을 40%~50%대로 안정화 시켰다.

- 결국 핵심은 정부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거나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치에 기반하여 공정한 사회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2011년 2월 1일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등을 올 해의 핵심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치 아젠다에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사회] 갈 길 먼 공정/신뢰/법치 사회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서 ‘공정사회 구축’ 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의 반등을 이끌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 및 그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 정부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 “정부는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 는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은 34.6%,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63.7%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사회론을 내건 2010년 8월 전 후의 조사를 비교해봐도 큰 변화가 없다.
-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손해” 라는 인식에 67.8%가 동의하여 법치주의 및 공정사회의 제도적 기초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72.7%,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63.7%가 이러한 인식에 동의했다.
- “한국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 는 계층상승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2009년 10월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41.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31.2%, 이번 2월 조사에서는 33.4%에 그쳤다.
-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지도층의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겨우 13.9%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 13.5%,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17.1%로 의미있는 변화를 찾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59차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사회의 실현에 있어 사회 지도층의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이라 했지만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냉담하다.
- “우리 사회는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는 주장에 대해 절반수준인 52.3%가 동의했다. 이는 2009년, 20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결과이지만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엘리트 뿐 아니라 공정사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사회지도층, 사회계층구조 등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여론이 과반에 근접하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2] 공정사회/신뢰사회/법치사회 평가 (%)

	2009년 10월	2010년 10월	2011년 2월
정부는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 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	동의 34.7% 동의 안함 64.4%	동의 36.2% 동의 안함 63.7%	동의 34.6% 동의 안함 63.7%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다	동의 72.7% 동의 안함 26.1%	동의 63.7% 동의 안함 36.3%	동의 67.8% 동의 안함 30.9%
한국 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	동의 41.7% 동의 안함 56.9%	동의 31.2% 동의 안함 68.5%	동의 33.4% 동의 안함 62.8%
한국의 지도층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동의 13.5% 동의 안함 85.8%	동의 17.1% 동의 안함 82.6%	동의 13.9% 동의 안함 83.6%
우리 사회는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동의 45.5% 동의 안함 54.2%	동의 45.1% 동의 안함 54.7%	동의 52.3% 동의 안함 46.5%

[개헌]

“올해 내 개헌 추진” 찬성 51.0%, 반대 38.9%, 모름/무응답 10.1%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 찬성 38.3%, 현재 제도 유지 57.2%

-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대로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38.9%로 찬성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모름/무응답’ 이 10.1%나 된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 그러나 논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8.3%, 현재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57.2%로 권력구조 재편 차원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체제 전반의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하는 권력구조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 여론이 큰 것이다.
-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시 권력구조 재편 논의가 불가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민생현안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권력재편 논의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



우 국정 아젠다로 부각되기도 전에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3. 안보/남북관계

안보불안감 다소 약화, 81.5%(연평도 직후) → 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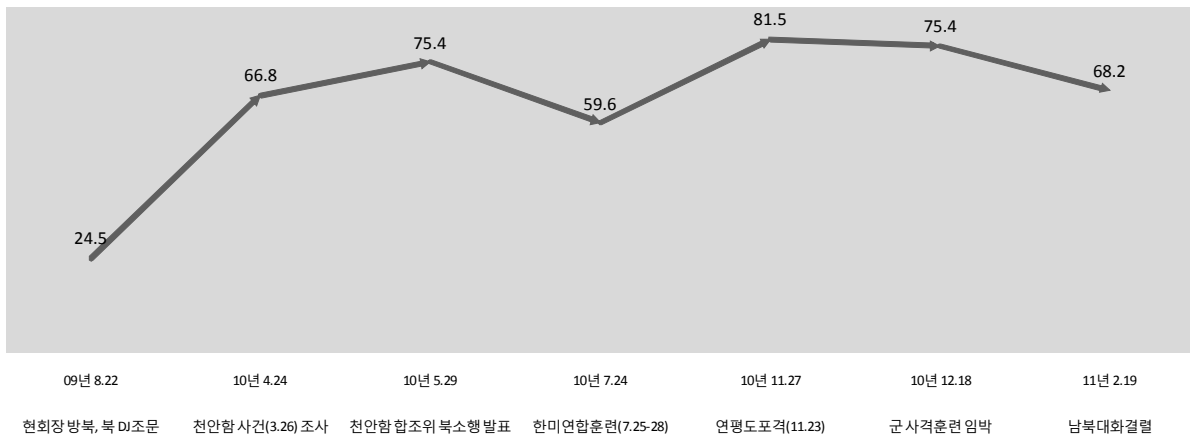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의 안보불안 수준 → 남북관계 개선 여론 고소

- 앞서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안보/남북관계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지난 12월 조사와 비교할 때 줄어 든 것은 연평도 피격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안보 및 남북관계 아젠다의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안보환경은 지난 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돌발 변수에 의해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 악화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및 남북관계 관련 아젠다는 국정의 핵심아젠다로 이해하는 여론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2011년 정부는 “경제” 아젠다에 최우선순위를 두되 “안보/북한” 변수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여전히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기는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하다는 응답비율 변화를 보여준다.²⁾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현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면서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무드에 들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24.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 들어와 천안함 사건(3.24) 이후 4월 조사에서 66.8%, 정부의 천안함 사건 진상 발표 직후인 5월 조사에서는 75.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7월 들어와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59.4%까지 떨어졌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11월 조사에서는 81.5%가 안보불안감을 토로했고 12월에는 다소 낮아져 75.4%, 이번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 발발 당시 수준인 68.2%로 나타났다.
- 연평도 포격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이러한 돌발변수의 발생을 억제할 환경이 없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셈이다.

2) “현재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 중에 택일. 데이터: <EAI.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 역대 안보불안감 변화는 <EAI 여론브리핑> 91호(이내영·정한울)를 참조할 것



[그림7] 안보불안감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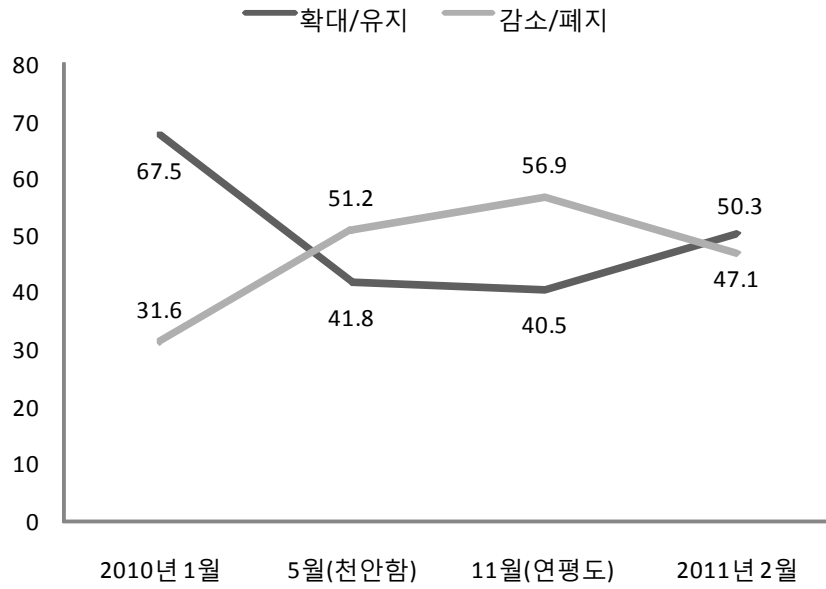
대북지원 확대/유지 입장 늘고, 남북 정상회담 찬성 65.7%

대북지원 “축소/폐지하라” 31.6%(1월) → 51.2%(5월) → 56.9%(11월) → 47.1%(12월)

-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 대북지원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6%였고,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1.6%에 불과했다.
-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5월 조사에선 확대 혹은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41.8%, 연평도 사건 직후인 11월 조사에서는 40.5%로 1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남북간 경색국면과 안보불안이 장기화 되고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차츰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유지하라는 입장이 50.3%로 과반을 넘었다.
- 반면 감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조사에서 51.2%, 11월 조사에서 56.9%로 과반 수를 넘어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7.1%로 3달 전 대비 9.8%포인트나 낮아졌다.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선호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분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5.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찬성 여론이 73.5%로 높고, 중도층에서 66.2%,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59.7%로 이념성향에 따른 편차가 확인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림8] 대북지원 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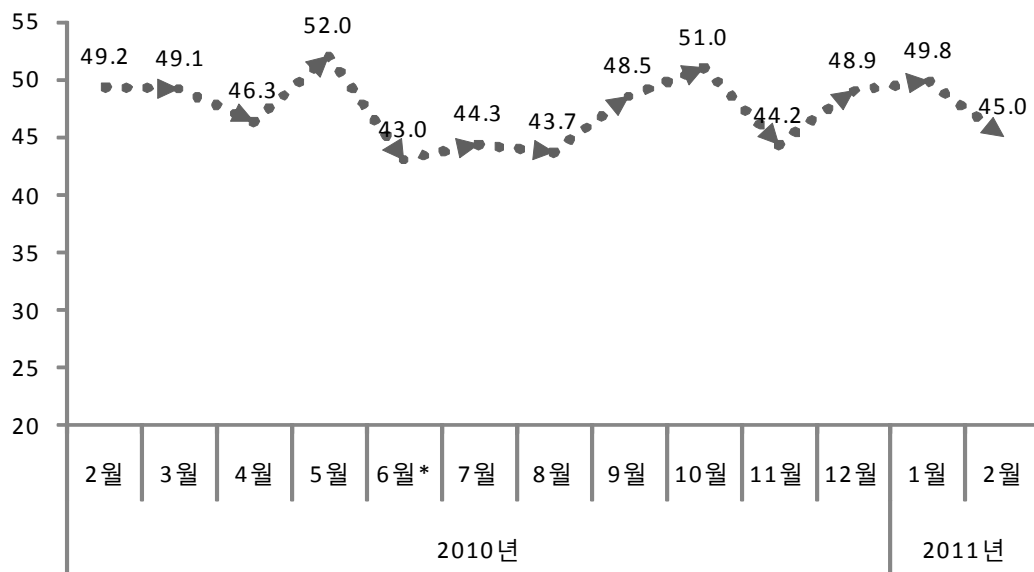


【주요 정치 지표】

[대통령 국정지지율] 2월 45.0% 전월 대비 4.9% 포인트 하락

- 2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월 대비 4.9% 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아덴만호 구출 작전 등으로 연초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물가불안 등 민생현안과 최근 군 비리 사건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림9]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차기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박근혜 36.0%, 유시민 7.2%, 오세훈 5.7% 순

- 2월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전월 대비 4.1% 포인트 상승한 36.0%였고 유시민 전 장관이 7.2%로 2위,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각각 5.7%, 4.5%에 머물렀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전월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6%로 대선행보에서 벗어나 있는 한명숙 전 총리(4.4%)에도 못 미치고 있다.
- 그 뒤를 정몽준 전대표(3.0%), 이회창 대표(2.9%), 정동영 전 장관(2.2%), 김두관 지사(1.1%), 정세균 전 대표(0.7%), 이재오 특임장관(0.3%)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2011년		2010년				2011년 2월-1월 차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박근혜	36.0	31.9	28.5	30.8	34.3	28.6	+4.1
유시민	7.2	9.7	8.7	8.5	6.9	10.6	-2.5
오세훈	5.7	6.7	6.7	4.1	4.3	7.2	+1.0
김문수	4.5	3.9	5.8	4.4	4.7	6.1	+0.6
한명숙	4.4	6.6	4.5	3.8	6.6	6.8	-2.2
손학규	3.6	6.8	4.9	5.8	5.7	6.1	-3.2
정몽준	3.0	4.1	3.3	2.7	2.9	3.1	-1.1
이회창	2.9	3.6	3.8	5.3	3.4	4.6	-0.7
정동영	2.2	2.8	2.9	3.1	3.7	4.2	-0.6
김두관	1.1	1.5					-0.4
정세균	0.7	0.5	0.3	0.1	0.3	1.0	+0.2
이재오	0.3	1.4	0.0	0.8	1.0	0.4	-1.1
다른후보	2.1	1.3	2.7	2.1	2.4	8.4	+0.8
모름/없음	26.5	19.2	28.0	28.5	23.8	12.8	+7.3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정당 지지율] 두달 연속 한나라당 40% 대 진입, 민주당은 20.4%

민주당의 좌향좌로 중도 지지층 이탈 커

- 한나라당 40.8%, 민주당 지지율은 20.4%로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내내 한나라당이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20% 중반 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났지만,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3무 시리즈 복지노선을 강조하는 등 급격히 진보노선을 강조하면 정책적 좌향좌를 지향하고 나면서부터 지지율 격차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지지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

민주당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지지 축소

- 실제로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패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민주당의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 11월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는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로 29.0%→28.5%→29.3%로 정체되다 이번 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7% 수준까지 떨어졌다.

[표4]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3월~2011년 2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친박 연대	창조 한국당	진보 산당	국민 참여당	기타	무당파 *	
	3/27	34.5	23.1	1.5	4.9	2.5	0.4	2.2	1.5	4.9**	24.4
	4/24	29.7	17.6	3.7	5.4	0.7	0.9	0.8	1.7	12.2	27.3
	5/29	34.6	20.8	2.1	4.0	0.7	0.2	1.8	3.2	2.8	29.7
	6/26	33.8	27.1	2.5	4.7	1.8	0.1	2.4	4.4	3.2	20.0
10 년	7/24	34.4	30.7	2.2	5.7	0.8	-	1.3	4.2	1.9	18.8
	8/28	32.6	23.9	1.7	4.2	0.1	0.2	1.2	2.4	1.4	32.1
	9/25	37.7	25.3	2.1	5.8	0.6	0.2	1.7	3.0	2.6	20.9
	10/30	37.3	23.5	1.6	5.8	0.1	0.4	1.0	3.2	1.4	25.7
	11/27	35.2	22.9	1.5	3.7	0.6	0.4	2.5	3.8	1.9	27.6
	12/18	38.4	23.6	1.8	5.6	0.2	0.2	1.5	2.8	2.0	23.8
11 년	1/29****	42.3	28.1	1.3	2.4	-***	0.4	1.4	2.1	1.5	20.4
	2/19	40.8	20.4	2.2	4.2	0.9	0.4	1.1	2.4	1.2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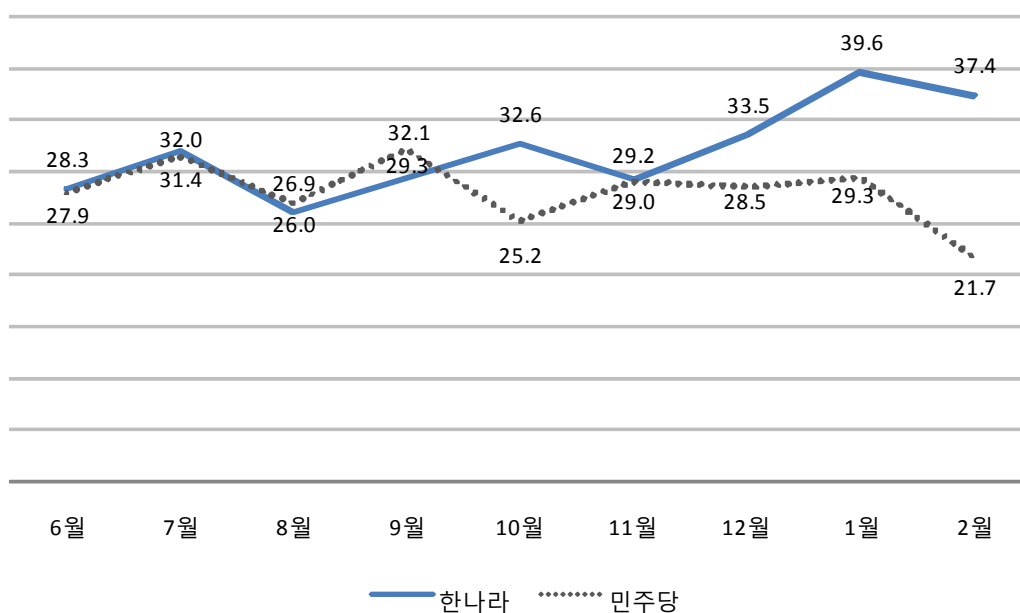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삼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 2011년 1월 조사에서는 묻지 않음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그림10]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6월~2011년 2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EAI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공동 매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이내영 고려대)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2009년 2월부터 매달 유권자들의 정치사회인식의 분포와 변화를 추적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 조사를 실시한다.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와 선호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과정이 필수적이다. 매월 말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를 통해 민의에 기반을 둔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월 조사개요

조사일시	2011년 2월 19일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가중치 부여)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pm 3.5\%$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CATI)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www.eai.or.kr)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정기여론조사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서상민(EAI 중국연구센터)
	이곤수(EAI 거버넌스센터)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부록]

